비정규직 등 2천명에 휴가비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2019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

올 관광객 3250만명 유치 목표
개인 15만원 내면 25만원 지급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9일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광 정책은 ▲생활관광 향유 기반 조성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정책 마련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확충 ▲서울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관광정책은 '2019~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는 올해 4개 중점분야, 37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관광객 3250만명을 유치, 총 31조275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대상자가 15만원을 내면 시가 25만원을 추가해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서와 3개월간 급여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소·렌터카 예약,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광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2000명에게 맞춤형 여행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시는 3월 서울관광재단 내에 관광산업 기초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서울관광 R&D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확충한다. 정부기관, 관광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평화관광자문단'을 운영해 서울 지역의 평화관광자원을 찾고, DMZ·JSA 투어 같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이 공식 인증한 '서울순례길'을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기 위해 팸투어 등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아울러 시는 세계 최고 MICE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MICE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4월 발표할 예정이다. 동남아는 K-POP, 일본은 미식, 인도·중동은 의료관광 등 타깃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시는 올해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발판 삼아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키겠다"며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 동력인 세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외국인 관광객 1350만명, 내국인 관광객 1900만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025억 투입… '걷기편한' 서울 만든다

휠체어 등 다닐 수 있게 보도 정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직접참여

서울시가 올해 총 1025억원을 투자해 걷기 편한 도시를 완성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해 직접 시설을 점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걷는 도시 서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은 ▲보도환경 정비 ▲교통약자 눈높이 정책 강화 ▲도심 도로공간 재편 및 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 ▲보행문화축제 확대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546억원을 투입한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장애 없이 이동하도록 평탄성 확보를 위한 정비를 하고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실시한다.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행환경 정책도 강화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보도분야 기준적합 설치율 80% 달성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한다.

퇴계로 2.6km 도로 공간 재편은 연내 마무리한다. 6~8차로를 4~6차로로 줄여 보행공간을 늘리고 양방향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세운상가 앞과 퇴계로 4~5가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이면도로 진출입부 보도 간 모든 횡단보도는 높이를 올려 보도와의 단차를 없앤다.

시는 보행 평탄성을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서울 대표 보행축제로 자리 잡은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조성해 걷는 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서울 도심은 다양한 정책시도를 통해 기본적인 보행여건이 갖춰진 상태지만, 서울시 전체의 보행환경을 보면 아직도 개선과제가 많다"며 "진정한 보행도시에는 작은 단차, 경사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정책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도서관에 걸린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현수막
19일 오전 서울 도서관에 북한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눈길을 걷다
많은 눈이 내린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을 찾은 시민이 눈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낡은 공장 800곳 '스마트공장' 탈바꿈

경기도, 756억 투입 비용 50% 지원

경기도가 올해 800여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오래된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 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 중견기업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8.2%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8%인 1,971개사(전국 1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은 30.0%가 늘고, 불량률은 43.5%, 원가 15.9%, 산업재해 22%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3. 관계부처 합동. 발췌). 기업당 고용도 평균 2.2명 증가하는 등 청년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와 솔루션을 최초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규구축과 기존 설비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도화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3년내 주차공간 6642면 확보

지원금 최대 100%로 확대
올 17개소 765면 완공 계획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660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주차장 건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 비율도 최고 100%까지 늘려 2022년까지 총 66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특히 비강남권역의 주택가 주차여건 개선에 힘쓴다. 2022년까지 목표치의 63%(4200면)를 비강남권에 조성한다. 현재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강남3구 141%, 비강남권 130%이다. 비강남권은 강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시는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 보조 심사 대상을 사업비 60억원 이상 주차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입체식 주차장뿐 아니라 평면식 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소규모주차장(10면 내외)은 투자심사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시는 기존 최대 70%까지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비용을 최대 100%로 늘렸다. 최초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0~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추가로 10~30%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내 총 62개소 2922개 주차면 건설에 시비를 지원, 17개소 765면을 완공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향상되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가 야기하는 긴급차량 진입곤란문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등 안전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가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주차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강화

지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4만4000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24만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이같은 건축물이 4만4040 동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3651동이 6층 이하 건물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지면서 전국의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의, 지난해 12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수원=김승열 기자